

‘오현섭 쓰나미’ 민주당 덮치나

시의원 비리 일부 확인... 표적수사 의구심도

당권주자 관련엔 全大 흥행 악영향
박지원 “실정법 위반 단호 조치”

전당대회를 한달여 앞둔 민주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 사건의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이 3일 오 전 시장으로부터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승우(여수) 의원측에 수천만원의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부에서는 전당대회 전에 당 유력인사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전당대회 흥행은 물론 여론 상승세가 단 한번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로 상황을 지켜보며 문제가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기도 했다. 여수시의원 상당수도 오 전 시장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될 예정이어서 민주당 뒷받침 전방 mindset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주목된다.



G20 재부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폐막. 지난 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G20 재부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5일 막을 내렸다.

F1 머신 시범 주행... 팬들에 '재미' 선사

텔런트 류시원 등 3000여명 참석 '서킷 런 2010' 열려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50일 앞두고 '서킷 런 2010(Circuit RUN 2010)'행사가 4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삼호읍 F1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도 인사말에서 관람객들에게 "오늘 와서 보시니 아직 미미한 것이 많은 것 같아 걱정되시죠"라고 되물기도 했다.

행사가 열린 경기장 입구에는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로터스 등 슈퍼카 100여 대가 전시돼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외시 2부 합격자 41% 고위직 자녀”

홍정욱 의원 “7년간 22명중 9명... 특채도 7명”

외교통상부의 외교공무원 선발전형 가운데 하나인 외무고시 2부 시험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2부시험을 폐지하고 영 어능통자 전형 실시했다. 아울러 특별채용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직원 7명 중에는 전직 대사를 포함해 고위직 자녀 4명이 2등 서기관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명한 장관의 딸을 포함해 나머지 3명은 퇴사했다.

2004년부터 2부시험을 폐지하고 영 어능통자 전형을 실시했다. 아울러 특별채용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직원 7명 중에는 전직 대사를 포함해 고위직 자녀 4명이 2등 서기관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명한 장관의 딸을 포함해 나머지 3명은 퇴사했다.

보통고 입시 설명회. '특목고(자사고) 입시 전략'... 9월 12일(일) 오후 3시... 장소: KBS공개홀(상무지구)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창조기업의 시대, 그 무한한 가능성과 녹색 미래를 응원합니다. 녹색성장과 창조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10. 9. 8(수) 15:00 ~ 18:00. 장소: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강당

오현섭 반발로 변형 시민배심원제 도입

경선뒤 불공정 경선 재심 청구 후폭풍

여수시장 경선 어떻게 치러졌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

속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가 되기까지는 경선방법 선정 갈등에서부터 경선 뒤 재심 신청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협치 프리미엄'을 갖고 있던 오 전 시장은 당시 "시민배심원제도는 결국 특정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노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국민참여경선 실시를 요구했다.

결국, 지역 국회의원의 중재로 여수시장 경선방법은 당원전수 여론조사 50%, 시민배심원단 투표 50%를 반영하는 변형된 시민배심원제도로 치러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18일 열린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도 경선대회'에서 시민배심원단 투표 35.40%, 당원전수 여론조사 44.95%를 획득해 종합득표 40.18%로 여수시장 후보로 선정됐다.

반면 김 후보는 시민배심원단 투표에서 71표(44.10%)를 획득했음에도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30.71%(1153명)에 그쳐 근소한 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경선이 끝난 뒤 당원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재심 청구 등이 이뤄지는 상당한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은 "실정법 위반에 대해선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수에서 대규모 재보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이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